



IFS 국가 정책 제언

2024 미국대선과 한반도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하상응 교수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정건 교수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태서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전재성 교수





1

2024 미국대선 결과와 국제정세의 변화

선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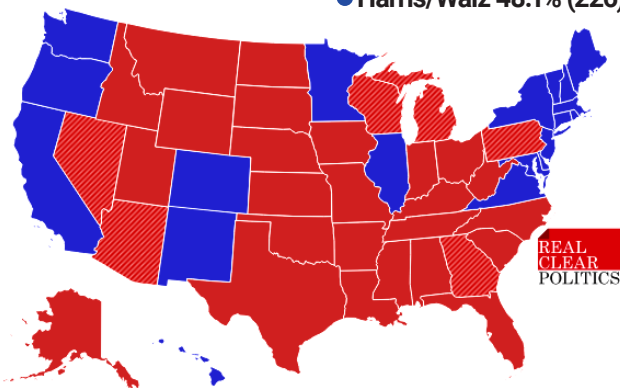
•트럼프 전대통령의 압승

-각축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로, 트럼프 전대통령이 해리스 후보를 쉽게 물리침.개표가 완결되지는 않았지만 7개의 경합주(AZ, GA, MI, WI, PA, NC, NV)에서 모두 트럼프가 이김.

-2016년에는 트럼프가 클린턴보다 약300만표를 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수에 앞서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 2020년에도 트럼프는 전국 단위 득표율에서 바이든에게 뒤진 채 패배함.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전국 단위 득표율에서도 해리스를 누른 것으로 파악됨. 이는 2020년 대비 2024년에 거의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아진 것으로 재확인됨.

-2016년과 2020년에 트럼프의 표를 과소추정한 여론조사 회사들이 나름 보정에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도 여전히 트럼프 표를 과소추정한 것으로 확인됨. 이 문제는 여론조사 기관을 비롯한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은 트럼프 지지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중설임. 이러한 비응답 편향(non-response bias)은 보정하기가 무척 어려움.

● Trump/Vance 50.2% (312)
● Harris/Walz 48.1% (226)



•결과의 해석

-2024년 선거 결과는 간단히 말해"경제 투표"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음. 인플레이션으로 민생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현직자 대통령(정당)이 선거에서 이기기는 어려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솟구치던 물가를 3년차 때부터 눈에 띄게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유권자들의 기억에는 4년 전 물가와 지금 물가의 차이만 남아있음. 심지어 올해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결정을 하여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음을 시사했음에도 그것이 유권자들의 민심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음.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성과를 선거운동 기간 중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 이토록 인플레이션이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현안이 된 것은 1980년 선거 이후 처음임.

-바이든 행정부 때 더욱 심각해진 이민 문제 및 국경 문제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였던 것 같음.트럼프는 과거에 했던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자제하고, "법과 질서"의 언어로 이민/국경 문제를 접근하였음. 이것이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반향이 있었던 것 같음.



-해리스의 선거운동 전략의 핵심인 임신중절권과 민주주의에의 위협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보긴 어려움. 다만 인플레이션과 이민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보는 것이 맞음. 해리스가 본인의 정체성(여성, 흑인, 아시아계 미국인)을 강조하지 않은 것도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평가됨.

-다만 2016년부터 2024년까지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 민주당이 여성(백인 혹은 유색인종) 후보를 내세워 성공하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결론이 가능함. 이는 현재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인들의 지형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산업	무역	안보
보조금 지급?	관세 10%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중국 관세 추가 60%	에너지 보조 중단?

•산업정책

-바이든 행정부의 업적인 반도체 육성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크게 늘었음. 바이든 행정부는 보조금을 통해 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작업을 하였음.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트럼프가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임. 트럼프는 차라리 관세를 통해 자국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임.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 자격으로 반도체 육성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할 수는 없음.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법들 때문에 혜택을 보는 지역구 의원의 상당수가 공화당 소속이기 때문이기도 함.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차원에서 시행세칙에 손을 댈 수는 있겠음.

•무역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임. 공약에

따르면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10%의 관세를,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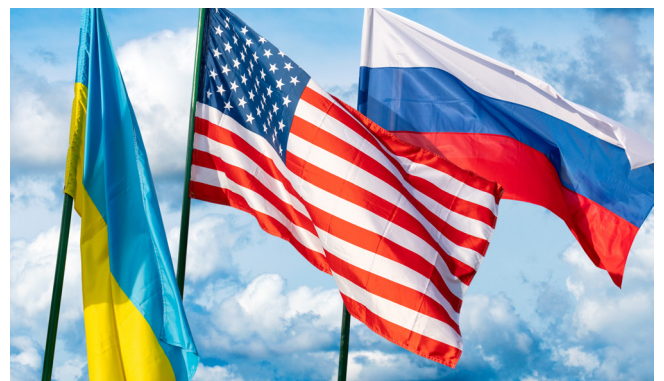
-이미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보편관세를 적용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데에는 법적 근거와 관행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음. 대통령은 연방의회가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옛 법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하고자 함. 중국에 대한 60% 관세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있을 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과거의 법에 의거하여 가능함.

-다만 이러한 관세의 남용은 필연적으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게 됨.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업계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만큼 관세를 부과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다고 보기도 함.

•안보정책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중동 정국은 네타냐후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짐.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연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쉽지 않을 것임. 이렇게 되면 서유럽 국가들의 선택에 주목해야 함. 서유럽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자국 국방비 증액에 신경을 쓸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함.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서유럽 국가들에게 제공되는 에너지 보조 역시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2 2024 미국대선과 한반도

한국외교에의 함의

•탈단국시대 패러다임 변동

-탈냉전기 한국외교 패러다임의 기본 전제는 이 지역에 미국이 압도적 현존을 과시하고 있으며, 그 미국이 만들어 놓은 패권질서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한다는 가정이었음.

-그러나 이른바 “시대전환(Zeitenwende)” 이후, 이 기성 패러다임의 토대가 침식되고 있음. 미중경쟁의 맥락에서 한반도 문제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전화되고 있으며, 한미일 삼각협력을 통한 대중국 봉쇄망 수립이라는 바이든 정부의 의제가 관철되어 왔음.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선언은 이런 신냉전적 어젠다에 3국이 합의했음을 의미함.

•한미동맹에의 여파

-그러나 탈단국 시대 워싱턴의 대전략이 전반적 축소의 방향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동맹 딜레마 중 “방기(Abandonment)”의 공포가 서울에서 심화되고 있음. 또다시 1970년대라는 역사적 유비를 동원한다면, 제2의 닉슨 쇼크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트럼프 시대에 점증하고 있음.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요구와 제조기업에 대한 리쇼어링 압력이 일상화되면서 동맹비용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에 더해,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역할 재조정이 운위되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음. 이에 박정희 정권 말기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독자 핵무장 옵션 같은 방기에 대비한 자주국방노선이 공론장의 수면 위로 부상중임.

-이와 관련해, 과연 대만문제에 대해 트럼프 2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시금석이 될 것임. 베이징과의 지정학적 흥정과정에서 타이베이에 대한 워싱턴의 공약이 약화될 경우, 서울의 여론은 급격히 동요할 수 있음.

•2기 트럼프의 대북정책 시나리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워싱턴 조야에서 이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해졌음. 그에 대한 대안으로 현실주의적인 군비통제론이 부상함. 이는 결국 북한의 ICBM 폐기와 핵탄두 생산 동결 수준의 중간 단계(interim step)에서 문제를 봉합하는 방식임.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북핵문제의 우선순위가 사실상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일관한 바이든 정부에 비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함. 캠페인에서부터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특수관계를 계속해서 거론하였음. 재선이 불가능한 마지막 임기의 레거시로서 북한문제를 고려함과 동시에, 여타 국제현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이슈로 인식하는 듯한 인상임.

-1기 정부 당시의 존 볼턴 같은 네오콘의 견제가 부재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처리 이후, 동아시아 세력권 재조정의 맥락에서 북한문제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음. 즉, 미중 전략경쟁의 맥락에서 평양을 베이징의 영향권에서 일정 정도 떼어 놓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군비통제식의 미봉책으로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음.



● **정책제언: 현실정치적 다극체제에서의 겨울나기**

- 탈단극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미국패권질서를 전제한 기존의 자유주의적 중견국 외교 패러다임은 폐기되어 가고 있음. 또한 바이든 정부기 “역사의 변곡점” 담론에 조용하는 신냉전 진영외교 혹은 가치외교의 유효기간도 만료되었음.

- 이런 시대적 맥락하에 과거 구냉전 시기의 사례들에서 오늘날 외교정책노선 탐색의 교훈을 찾아볼 수 있음. 가령, 이승만, 박정희 시대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함. 냉만화된 냉전 자유주의적 이미지와 달리 실제 당시 양국 사이에는 커다란 긴장관계가 존재. 이승만 정부의 경우 반공포로석방 같은 벼랑끝 전술을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얻어냈고, 박정희 정권은 비밀 핵개발까지 추진하며 자주국방의 가능성을 타진했었음.

- 같은 맥락에서 구냉전 시대 나토 내부에서도 프랑스나 서독과 같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정책 공간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음. 프랑스는 나토 탈퇴와 독자적 핵 개발 등의 결단을 감행하기도 했으며, 서독 또한 동방정책 같은 자주적 어젠다를 가지고 냉전 구조의 틈새를 만들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음.

- 현재의 역사적 국면에서 한미일 협력을 포함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파트너십 강화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일정 부분 현실정치적 필요에 따른 결과임. 그럼에도 이러한 구조적 제약하에서 구냉전 시대의 파리나 본처럼 향후 서울이 독자적인 의제를 담보하는 문제, 즉 예를 들어 타이완해협이나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어떻게 이니셔티브를 쥐고서 미국을 설득하거나 일정한 거리 유지를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이는 이미 다가온 탈단극 시대, 우리와 같은 중견국가가 국익을 추구하는 데 사활적 화두라고 할 수 있음.

